광주시의회 의원들이 21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윤봉근 의장의 제190회 임시회 폐회사 발언과 관련, 시청 간부 공무원들의 '반박 성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도쿄 납치현장서 '고난·용서의 순례'

■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행사 어떻게

전국 곳곳 학술·강연회 삶·사상 재조명
음악·전시회…종교계도 추모 법회·예배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시43분. 숱한 역경과 가시밭길을 헤치며 민주화와 남북 화해를 위해 한 평생을 오롯이 바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년이 흘렀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을 맞아 고인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행사가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다음달 10일부터 18일까지 펼쳐진다.

◇**추모학술대회·강연회**=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김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학술대회와 강연회가 잇따라 열린다.

김대중도서관은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김대중과 동북아 평화공동체'(와다 하루끼 일본 동경대 교수), '김대중의 삶과 사상, 평화를 위한 길'(김성재 김대중도서관 관장), '현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을 주제로 남북화해에 이바지한 그의 업적을 기린다.

서울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도 16일 '민주주의와 평화의 트랜스포머'란 주제로 추모 강연회가 진행된다.

목포에서는 '김대중 리더십배우기 강좌'가 열리고 영광에서도 23일 '김대중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를 주제로 강연회가 개최된다. 충북 청주(8월 11일)와 경기 평택(8월 12일)에서도 그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

◇**추모문화제·전시회**=시민단체 '행동하는 양심'은 다음달 2일 오후 7시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님이여 우리를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추모 시낭송회를 갖고 시와 음악, 춤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꿈과 사랑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목포시에서는 다음달 11일 오후 7시 평화광장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모 음악회를 연다.

김대중도서관은 8월 한 달간 김 전 대통령의 저작물과 애독서를 비롯, 육필수첩, '국정노트'를 포함한 주요 사료들을 전시한다.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는 추모기간(8월 11일~17일)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모은 '추모어록전'이 열리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는 김 전 대통령의 생애 주요 사진들이 전시된다. 이 밖에 21일~22일에는 고인의 생가가 있는 하의도에서 '젊은 그대, 평화를 이야기하자'는 주제로 '2010 청년 김대중캠프'가 열린다.

종교단체도 추모 행사에 동참한다.

원불교는 10일 서울 현충원에서 김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의식을 갖고 15일 전국 교당에서 추모 법회를 연다. 12일엔 원불교 서울회관, 전남교구청에서 추모 강연회를 열고 13일에는 고인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원광대에서 개최한다.

기독교 추모위원회도 오는 8월 9일 오후 7시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서거 1주기 추모예배를 열고, 불교계도 공식 추모기간 추모법회를 진행한다.

◇**해외에서도 추모 물결**=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추모행사가 계획됐다.

'고난과 용서, 화해와 평화 여정 순례단'은 12일 '김대중 동경납치사건' 현장 방문 행사를 진행한다. 생전 김 전 대통령의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낸 인동초의 삶을 되돌아보는 행사로, 지난 1973년 납치 현장인 일본 도쿄, 오사카, 서울 동교동 등을 돌며 고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되돌아본다.

또 일본 도쿄(8월7일), 오사카(8월 8일)에서도 김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리고, 미국 워싱턴(8월15일), 독일(8월18일)에서도 추모제와 음악회, 사진전이 개최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행사 일정

추모위원회 공식행사 (8.10~8.18)
- 자서전 출판 기념회 〈8.10, 17:00 서울그랜드 힐튼 호텔〉
- 서거 1주기 추모문화제 〈8.17, 18:30 서울시청앞 광장〉
- 서거 1주기 추도식 〈8.18, 10:00 현충원 현충관 광장, 김대중대통령 묘역〉

김대중도서관 주관 추모행사
- 광주지역 학술회의 및 추모강연 〈8.12, 14:0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서울지역 추모강연회 〈8.16, 15:00 김대중 도서관 컨벤션홀〉
- 대통령 저작물 도서전 〈8.1~30, 김대중 도서관 1층〉
- 대통령 기증자료 전시전 〈8.1~30, 김대중 도서관 2층〉

추모강좌·강연회
- 목포 '김대중 리더십 배우기' 강좌 (9회) 〈7.9~8.27,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영광 추모강연회 〈7.23, 16:00 영광군 농협 대강당〉

추모문화행사
- 추모시낭송회 〈8.2, 19:00 김대중 도서관 컨벤션홀〉
- 추모어록전 〈8.11~17,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 추모음악회 〈8.11, 19:00 목포 평화광장〉
- 추모사진전 〈8.10~18,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 '김대중 동경납치사건' 현장 방문 〈8.7~8, 일본 도쿄, 오사카, 서울 동교동 방문〉
- 김대중 대통령 동상 제막식 〈8.12, 10:00 전남도청 광장〉
- 추모 도보순례 〈8.1~15, 김해 봉화→광주〉

해외추모행사
- 미국 워싱턴 추모제 〈8.15, 19:00〉
- 독일 베를린 추모 음악회, 사진전시회 〈8.18, 베를린 자유대학〉
- 일본 도쿄·오사카 추모식 〈8.7, 도쿄 / 8.8, 오사카〉

"6자회담 풀리면 이희호 여사 방북 가능" 정세현 前통일부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1일 이희호 여사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오는 8월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지나고 나서 6자회담 국면이 좋은 쪽으로 풀리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6월에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방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북측은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계기로 지난 4월 이 여사의 방북을 초청했었다.

정 전 장관은 "그것(방북초청)은 유효하다고 서로 이야기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이 최근 임진강 상류댐 방류계획을 사전에 통보한 것에 대해 "천안함 사태 이후 경직된 남북관계와 관련, 뭔가 좀 유연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20일 "사실 출구전략은 우리가 취할 단계는 아니며 북한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는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받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을 찾는데 제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은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의회 긴급 의원총회 발언록

광주시 간부들 시의회 경시 묵과할 수 없다
대책위 꾸려 강력한 대응 의회 위상 찾아야
진상파악과 공개사과 요구 통해 책임 묻자

21일 오후 1시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의회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광주시 집행부를 성토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전체 의원 26명 가운데 25명이 참석한 이날 의총에서 시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의회를 경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등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집행부 간부들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집중 성토했다. 또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강경발언에서부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신중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윤 의장은 "의원과 시민사회 각층의 의견을 들었고, 이를 토대로 우려와 기대를 표명한 것인데 시 간부들이 조직적이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해왔다" 면서 "이는 의회경시며, 모독이고 또한 의회 민주주의 논의 구조를 방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상필 의원은 "시 간부들의 행동은 사상 유례없는 작태"라며 "이는 의회 전체를 무시한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책위를 구성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종 의원은 "초반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장도 이렇게 흔드는데 앞으로 평의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는 시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집행부가 시의회를 길들이려는 수순이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하고 의회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론을 펴는 의원들은 새로 출범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정립을 위해서도 이번 사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집행부에 대한 초반 기선 제압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받겠다는 의도도 엿보였다.

반면, 강경일변도보다는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수였다. 대응 수위에 있어서는 의원들 간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

민노당 강은미 의원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는 동의하지만, 집행부 간부들의 몇 마디에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책위까지 꾸려야 하느냐"며 "시민 권익 향상 등에 대한 대책위를 꾸린다면 모르겠다. 앞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위를 구성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김보현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첫 출발한 만큼 시와 집행부 간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진상파악과 공개사과 요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대응을 본 뒤 추후 논의하는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손재홍 의원도 "현안이 생길 때마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식사과를 먼저 요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후 대응을 해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춘문 운영위원장은 "의회를 경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대응방식에 있어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선에서 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상당수 초선의원들이 의사진행에 미숙함을 드러낸데다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중심의 대책위 구성 논의가 일부 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의원들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광주시장 사과와 경위해명, 책임자 조치, 재발방지대책 등 4개 항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